

건설동향브리핑

제497호 (2015. 2. 2)

■ 정책 · 이슈

- 1.21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평가와 과제
-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건설 계약 관련 제도(II)

■ 경영 · 정보

-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의 에너지 미래

■ 경제 동향

- 2014년 주택 전월세 거래량 전년 대비 6.8%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투자, 올해 경제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21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평가와 과제

-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부작용 해결에는 역부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해야 -

■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대책을 확정·발표함.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의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임.
- 사전적인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주요 발주처들이 각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시스템(체크 리스트)’을 개발, 운용할 예정임.
 - 발주처가 입찰공고문에 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 업체의 입찰 탈락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됨.
-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현행 가격 중심 입찰제도의 개선과 경쟁을 제한하는 발주방식 상의 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해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기로 함.
 - 기존의 계약 단가에 기초한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토록 하는 ‘1사1공구제’는 폐지기로 함.
-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개인처벌 규정에 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상 개인의 처벌 규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규모를 2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기로 함.
 - 또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었는데, 건설기업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이행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운용 등임.
- 입찰담합 사건에 의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는 담합 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조사 대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입찰참가제한의 제척 기간 도입, 해외건설 수주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찰참가제한제도의 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제도 개

선과 일률적인 입찰참가제한제도를 위법성의 정도 및 책임 경중 등을 감안, 개별 사안 별로 제한 범위 및 기간을 결정토록 하였음.

■ 평가 및 과제

- 이번 종합 대책은 건설기업의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 제도상에 있다는 점에서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1사1공구제 등 발주 방식상의 담합 유발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입찰참가제한의 제척 기간 도입과 위법성 정도 및 책임 경중 등을 감안한 기간 결정 등은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입찰담합 사전 포착 시스템인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일명 입찰상황판)’이 1999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사전공지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 장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함.
- 또한, 자율교육 실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 등의 자정 노력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입찰담합의 사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보완되어야 함.
- 건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최근 막대한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데 따른 산업 내 영향과 이미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들로 인해 다수의 대형, 중견건설기업들이 공공공사 최장 2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유발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최근 부각된 입찰담합에 따른 산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대형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될 때마다 「국가계약법」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제재 또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행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건설 계약 관련 제도(II)¹⁾

- 국가 및 지방계약 법령, 예규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 예규

- 협상계약 사전검토 절차 신설(시행일 2015.1.5)
 - 사업부서에서 일상 감사 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 검토 의뢰
 - 협상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시 일상 감사 부서 검토 의견 첨부
 - 협상계약 대상 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내역 공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1절
- 제한경쟁입찰시 ‘재무상태’ 제한 규정 폐지(시행일 2015.1.5)
 - (종전) 제한경쟁입찰시 실적 · 기술 보유 상황 · 지역 · 물품 납품 능력 ·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 사유 규정
 - (개정) 제한입찰 종류에서 ‘재무상태’ 폐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2절
- 계약과정 공개시 수의계약 사유 공개(시행일 2015.1.5)
 - (종전) 수의계약 체결시 그 사유 미공개
 - (개정) 수의계약의 개요, 사유 및 법령 근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공사(시행일 2015.1.5)
 - (종전) 2천만원 이하 공사
 - (개정) 5천만원 이하 공사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2절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시 이행 부분 귀속 제외(시행일 2015.1.5)

1) 본고는 2015년에 변경되는 건설 관련 주요 계약 제도를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과 예규를 중심으로 2회로 작성하였음. 본고는 지난 495호(2015. 1. 19)에 이어 2회차임.

- (중전) 계약이행 중도 해지시 발주기관에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개정) 단가계약의 경우 이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미귀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4절

●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 사유 명확화(시행일 2015.1.5)**

- (신설)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포함
- (신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입찰 무효사유 발생시, 잔존 구성원만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2절

● **선금 지급 대상 금액 범위 확대(시행일 2015.1.5)**

- (중전) 공사·물품 제조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
(개정) 모든 공사, 물품 제조·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2절

■ **조달청 7등급 편성 기준 및 공사 배정 규모 확대(시행일 2015.1.1)**

● 편성 기준

- (중전) 토건·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120억원 미만 87억원 이상
(개정) 토건·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120억원 미만 82억원 이상

● 공사 배정 규모

- 토목공사 : (중전) 추정 금액 130억원 미만 87억원 이상
(개정) 추정 금액 130억원 미만 82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중전) 추정 금액 120억원 미만 87억원 이상
(개정) 추정 금액 120억원 미만 82억원 이상

홍갑표(연구위원 · kphong@cerik.re.kr)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의 에너지 미래

-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 사물인터넷으로 구축되는 생산비용 제로의 에너지 체계 -

■ 현 에너지 체계의 문제점

- 현 에너지 체계는 원료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 외에도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 발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중앙집중 발전 방식은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과 송전시설의 과잉 투자, 전력 생산지의 환경오염,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¹⁾ 등의 문제가 있음.
-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발전해왔으며, 전력망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소규모, 다수의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분산 발전의 개념이 등장함.
 - 분산 발전(Distributed Generation)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전력 사용처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다수의 발전시설을 의미함.

■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에너지 체계

-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한계비용 제로 사회’와 ‘협력적 공유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였음.
 - 한계비용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으로, 리프킨은 기술발전에 의해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고, 정보, 에너지, 제품, 서비스의 한계비용도 제로에 수렴해갈 것으로 주장함.
 -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재화를 만들고 남들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적 소유권과 수직 통합을 특성으로 하는 현 경제 모델을 바꾸고, 분산형 모델인 협력적 공유 사회를 도래시킬 것으로 주장함.
 -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제품 생산 비용을 제로로 만들 3D프린터,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제로로 만들 재생에너지, 그리고 제품, 서비스, 에너지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기술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로 실현될 것임.

1) 국내 전력 수급 문제점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3.12)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은 대규모 발전단지 밀집해 있는 인천(337.2)과 충남(266.9), 전남(266.3), 경남(266.0) 등 4개 지역에서 200%를 넘어선 데 비해 충북(5.9), 서울(4.2%), 대전(2.6), 대구(1.8), 광주(1.7) 등 5개 지역은 10% 미만의 전력자급률을 보임.

- 에너지 부문의 한계비용을 제로로 이끌어줄 미래 에너지 체계의 키워드는 재생에너지와 분산 발전,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CT 기술융합으로 정리됨.
 -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에너지는 초기 인프라에 투자하면 운영 비용 거의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생산 비용이 낮아진 재생에너지는 자가 발전시설, 소규모 협동조합의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되고, 사물인터넷과 융합되고 공유되면서 비용 제로에 가깝게 사용될 것임.
 - 또한 재생에너지의 분산 발전을 통해 미래 에너지 소비자는 곧 생산자가 될 것이며, 전력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효율도 개선될 것임.
- 리프킨은 재생에너지와 분산 발전, 사물인터넷의 체계로 에너지 인프라를 전환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향후 40년 안에 40%까지 증가할 것이며, 204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2차 산업혁명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도한 화석에너지의 효율은 13%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87%의 에너지는 전송 중에 거의 낭비된다고 보았음.
 - 정보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는 에너지 체계는 제로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가능하게 하며 제3의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주장함.

■ 에너지 공유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증거들

- 유토피아적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태양광 패널 생산 비용이 폭락하는 등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
 - 이미 음악, 영상, 뉴스, 출판물 등의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택시 서비스 우버, 모바일을 통한 카셰어링 등 서비스 부문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리프킨은 우리나라에 대해 “전력, 정보기술(IT), 물류 운송, 건설산업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나라”로 평가하였음.

성유경(책임연구원 · sungyk@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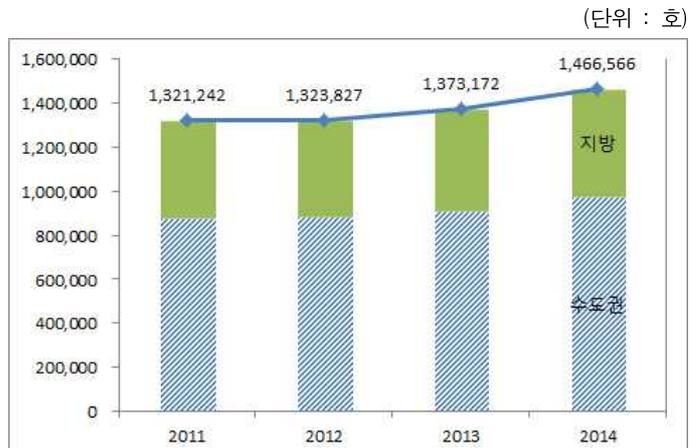
2014년 주택 전월세 거래량 전년 대비 6.8% 증가

- 임차시장에서 월세 전환 지속, 주택임대사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7만 호, 2011년 집계 시작 이래 지속 증가

- 2014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 6,56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사 수요 및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7.8만 건으로 전년 대비 6.9%, 지방은 48.8만 건으로 6.5% 각각 증가함.

<주택 전월세 거래량>



자료 : 국토교통부

-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 대비 5.3%, 아파트 외 주택은 8.1% 각각 증가하여 아파트 외 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2014년 12월 한 달 간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 아파트 외 주택은 0.3% 증가함.

<주택 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 : 호)

구분		전체 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거래량	전년 대비	거래량	전년 대비	거래량	전년 대비
12월	전국	117,431	3.5%	59,159	6.9%	58,272	0.3%
	수도권	76,610	1.5%	36,839	6.0%	39,771	△2.2%
	지방	40,821	7.4%	22,320	8.4%	18,501	6.2%
연간 (1~12월)	전국	1,466,566	6.8%	676,072	5.3%	790,494	8.1%
	수도권	978,105	6.9%	425,755	5.5%	552,350	8.1%
	지방	488,461	6.5%	250,317	5.0%	238,144	8.1%

자료 : 국토교통부

■ 월세로의 전환 지속 증가

- 2014년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41.0%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하였으며, 2011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음.
-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33.0%→2012년 34.0%→2013년 39.4%→2014년 4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33.8%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자료 : 국토교통부

■ 1.13 정책, 임대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시켜야

- 지난 1월 13일 정부는 월세 전환 증가에 따른 서민 및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 해소와 더불어 임대주택 재고의 장기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방안’을 발표함.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시 임차인 자격 및 초기 임대료 요건 등의 폐지와 더불어 용차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주거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공급자는 여러 가지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음. 따라서,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측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로 공급자가 자율로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변 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료 조정이 5%에 불과하여 적정 임대료 산정에 대한 리스크, 장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실 위험 등으로 공급자가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SOC 성능평가 과제 1차 연도 성과점검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서울경제TV	• ‘기센 부동산’ 프로그램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출연 - 재건축시장 제도 변화에 관한 대담
1. 27	기획재정부	• 국고국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점검평가 TF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2014년 시범사업 성과 발표 및 토의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2014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등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주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주택기금 금리 조정 체계 개선안 등 논의
1. 28	고용노동부	• 인력수급정책과 주최,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논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최근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논의
1. 30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제도개선포럼 총괄분과 5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발표 및 토론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1차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5. 2. 3(화)~5(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대상 : 관련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연구직원 모집

- 연구원은 건설 제도 및 정책 연구자(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논문 발표 가능자) 및 건설관리 연구자(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로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출신의 건설관리 전공자)를 모집
- 채용 직급 : 연구위원급
- 전형 절차 및 서류 제출 기한 :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 발표 및 면접, 2015. 2. 27(금)
- 문의 및 참조 : 업무지원팀(02-3441-0671), 홈페이지(www.cerik.re.kr)

건설투자, 올해 경제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인

올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수의 성장에 의존해야만 한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엔저 공세, 유로존 리스크, 산유국 위기 등으로 수출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전망이 밝지 않다. 실질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소비도 경제성장률을 밀돌며 성장기여도가 낮을 전망이다. 이제 기댔 곳이라고는 내수의 또다른 한 축인 투자밖에 없다. 그런데 설비투자는 기업실적 부진과 향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에도 증가세 확대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결국 201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 수준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의 증가율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비해 5.2%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3법 통과에 힘입어 주택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한 듯하다. 그러나 다수 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로 3~4%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는 달리 올해 건설투자의 회복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본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공급과잉으로 신규 주택분양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도 대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 신규 주택분양의 호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우리 경제의 성장폭을 좌우할 건설경기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 준비, 시의적절한 시행이 매우 필요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물가로 인해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이것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가 괜찮은 희망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저성장 구조화 추이는 이 희망마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성장의 지렛대 역할로 요긴하게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약 10%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주택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기존 시설의 재개축을 통한 성능 개선은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분명 일조할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2015. 1. 19>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